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

차기 정부의 기업 정책

2017. 3. 30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최 중 경

I. 차기 정부가 처한 환경

II.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1. 경제위기 방지
2. 정부정책의 연속성
3. 회계투명성 제고
4. 국가간 산업협력체제 구축
5. 정경유착을 넘어 産政協力으로
6. 미래산업 준비
7. 규제 완화
8.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9.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I. 차기 정부가 처한 환경

1. 대외환경

FRB 금리인상 可視化

- Trump의 공약(대규모 재정지출 확대, 감세) 감안 時 순차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
- 다만, 美 공화당이 기축통화국으로서의 글로벌 경제 주도권을 위해 과격한 금리인상 선택할 가능성 배제 불가
-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가정 時 ⇒ 내수와 수출이 동반 부진 현상 초래
 - ※ 2017.3.15일 금리인상 단행 (0.75% ~ 1.0%)
 - ※ 2017년 최소 2차례 이상 금리인상이 단행될 수 있음을 시사
(물가 상승률 1.9%로 연준 목표치 2.0%에 근접/ 실업률 4.7%로 완전고용실업률 4.8% 하회)

Trump 시대의 통상압력

- 환율 조작국 지정, 반덤핑 관세나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등 과격한 보호무역주의 시행 가능성
- 한-미FTA 등 再검토, 對美투자 권고 등 미국 측의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
 - ※ 'South Korea Deal was a disaster'(Trump , 2016.8)
 - ※ 그러나, 한미 FTA 5년 성과 평가 時 오히려 미국의 Benefit이 더 많음
 - 한국의 對美 투자 (약 512억 달러) Vs 미국의 對韓 투자 (약 202억 달러)
 - 미국의 한국 시장 점유율 (2011년 8.5 % → 2016년 10.6%) Vs 한국의 미국 시장 점유율 (2011년 2.6 % → 2016년 3.2%)

2. 대내환경

가계부채 임계수치

- 약 1,300조가 넘는 가계 부채 부실화 시 외화유동성 위기 초래도 가능 (Scandinavia형 외환위기)
- 한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90%로 G 20 평균인 60.5%를 크게 상회(선진국 76%, 신흥국 36%)

낮은 성장률과 청년실업

- 2017년에는 내수회복세 둔화되고, 정치 상황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예상
- 유례 없는 2%대 低성장 기조 지속 전망
- 성장둔화에 따른 기업심리 위축, 투자부진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청년 고용 여건 악화

고령화

- 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잠재 성장률 하락
- 생산가능 인구는 '16년 37백만명을 기점으로 '17년부터 감소세로 전환
- 2060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약 40%로 일본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 도달 예상

3.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및 동북아 안보구도 개편에 따른 마찰

Asia Pivot, Contain China

'Trump' 시대

- America First
- No TPP
- 한국을 먼저 방문한 Mattis 국방장관

한국에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

(관광 축소, 限韓令, 화장품 등 수입불가 판정, 롯데 보이콧 등)

일본 재무장·위안부 문제 등으로 한·일 갈등 장기화 전망

새로운 세계질서
등장에 따라
통상, 안보, 국내외
경제적 이해관계의
새로운 정립과 성찰
필요

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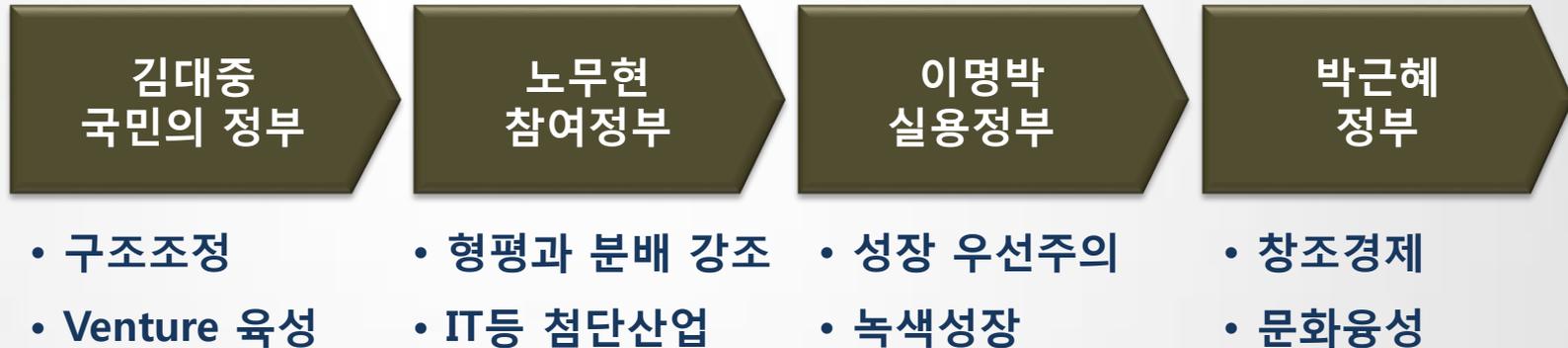
1. 경제 위기 방지

- **한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 가계부채, 부동산시장, 미국 금리 인상이 '불(Fire)의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점**
 - 한국경제를 지키기 위해 이 연결고리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
- **한국경제의 위축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점**
 - 재정 조기 집행,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등을 통해 경기 안정화를 추진, 위축된 소비를 진작
 - 가계부채 증가율 안정화, 분할상환/고정금리 확대 등 통해 가계부채의 量과 質을 개선
- **대외적 불확실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황에 따른 즉각적 시장 안정 조치 필요**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한-미간 무제한 통화스왑 추진**

2. 정부 정책의 영속성

- 5년마다 반복되는 정부조직 개편 및 정책 기조 변경 중단 필요

- 중장기적 안목과 치밀한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정책 수립이 불가능



- 통일·산업·우주 정책에 있어서는 반드시 정책의 영속성 필요

- 특히, 통일정책과 산업정책, 우주개발은 단기적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투자의 회임기간이 길어 최소 20년 이상의 정책 영속성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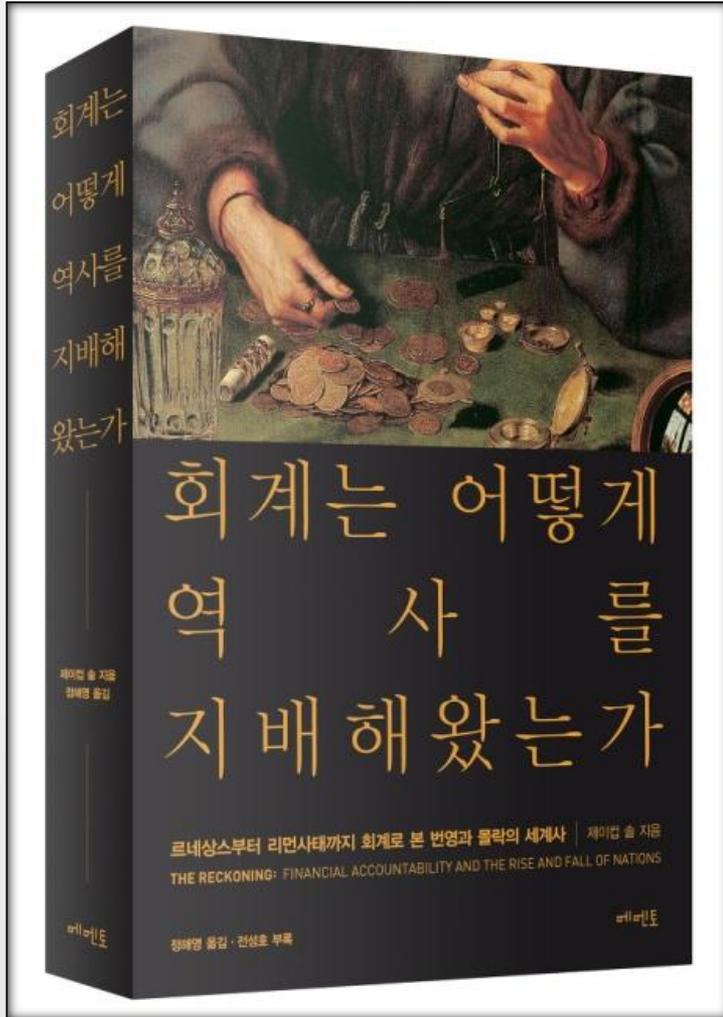
3. 회계투명성 제고

- 회계 부정을 막고, 회계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높일 수 있음
 - 오염된 회계가 국가경쟁력을 갉아 먹듯, 투명한 회계는 국가경쟁력을 끌어 올리는 것
- 회계투명성만 확보해도 ⇒ 경제성장률 2%p 오른다!!
 - 경제학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연구하는 학문
 - 회계정보는 경제활동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는 기초자료
 - 회계정보가 투명하면 ⇒ 자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 신기술이 육성되고 진정한 新 산업이 성장하게 될 것 (모뉴엘 VS 증강현실(AR)·터치스크린 기술 개발 회사)

낮은 회계투명성으로
경제의 자원배분이 왜곡

국내 사업기회의 축소로
경제성장률 하락

회계투명성을 높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할 시점



저자 : Jacob Soll (역사학자, 회계학자)

- 회계투명성이 기업, 나아가서는 국가의 흥망과 밀접하게 연관

(사례)이탈리아 상인의 번영, 스페인 제국의 패망, 네덜란드 황금시대, 루이14세의 프랑스의 파산, 산업혁명, 미국건국, 대공황과 금융위기 등

(*) 우리나라: 회계불투명으로 인한 외환위기 발발 (1997년), 대우조선해양 등 대규모 분식회계로 IMD 회계신인도 순위 최하위(2016)

- 회계는 도덕적·문화적 체계의 일부
→ 회계교육을 도덕·예술·철학·정치에 관한 필수 교육과정과 이론에 통합시켜야 함

4. 국가간 산업협력체제 구축

1. 개도국과 협력

적정기술 (AT ;
Appropriate
Technology)의
활용

- 개발도상국의 값싼 노동력과 토지 + 기존 기술 활용
⇒ 노동집약산업 등의 진출로 경쟁력 확보 가능

산업자원
SWAP
(Industry
Resource
Swap)

- 자원부국과의 협력 / 산업다변화 지원을 도모하면서
자원개발협력 추진
(예시) 중동의 석유화학 산업 : 중동 원유 + 한국의 정제기술

4. 국가간 산업협력체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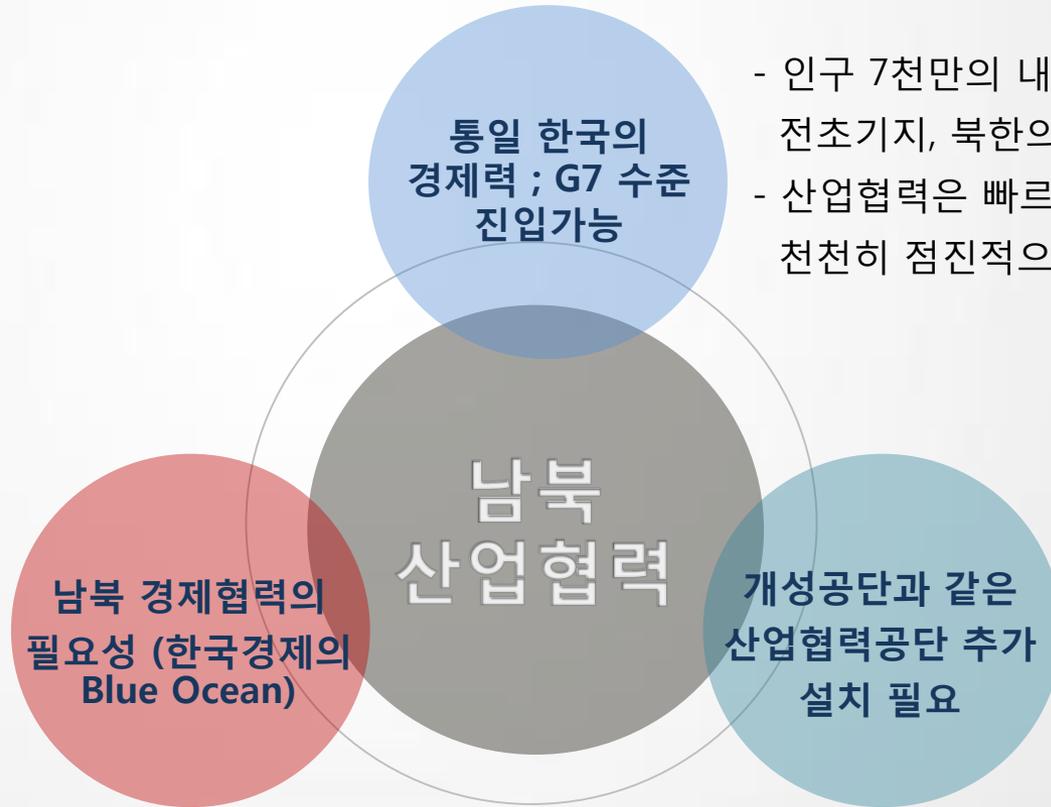
2. 선진국과의 산업협력(한·미 협력 강화)

- 미국의 제조업 부활정책(Reshoring) ⇒ 미국의 앞선 기술과 한국이 보유한 공정관리기법과 시공능력의 시너지 창조
 - 록히드 마틴과 KAI(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컨소시엄 : T-50 초음속 훈련기
 - 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원자력 건설 컨소시엄 : 아부다비 원전 4기 수출
- Trump 시대의 개막 (10년간 SOC구축에 1조 달러 투자)
 - ; 미국 내 도로교통, 신재생 에너지 분야 등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
 - ⇒ 한국기업 참여 : “새로운 기회”로 (LG, 삼성, 현대차 그룹 미국 內 투자 가시화)

- 정부보직순환 문제, 대기업 CEO의 단명 등 장기프로젝트 추진 時 걸림돌 해결 필요
예시) 사우디아라비아, 아부다비 국부펀드(중동의 석유고갈 이후의 대비책)가 중국으로 관심 이전
- 장기적 Vision을 가지고 국가간 산업협력 프로젝트 추진할 수 있는 半官 半民 형태의 해외개발투자공사를 설립

4. 국가간 산업협력체제 구축

4. 남북 산업협력 : 개성공단 재개, 추가



- 인구 7천만의 내수시장, 북한이 제조업 전초기지, 북한의 자원·노동력 활용
- 산업협력은 빠르게 확대하되, 통일은 천천히 점진적으로 !!

-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과 남한 자본·기술의 시너지 ⇒ 남·북 相生 (win-win)의 전략
- 통일비용의 절감 (북한의 소득수준 상승)
- 군사적 긴장완화와 동질감 확대

- 산업협력의 폭과 깊이를 심화
- 북한 내 지역 균형 발전 도모
- ※ 현대경제연구원의 개성공단 가동 10년의 평가 → 한국은 직접경제적효과(32.6억달러, 경제적 기대효과 약 299억달러)

- **과거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전제로 정부가 산업이 부담하는 위험을 분담 (Risk -sharing)하는 구조**

예시 ; ① 제철, 비료,항공 등 물류, 중공업 분야 등 투자규모 大, 투자 회임기간

(Gestation period)이 긴 산업에 정부가 先 투자 → 경영역량 축적 → 민영화

② 신용보증제도 (Credit Guarantee System)

- **정부의 위험 분담기능은 여전히 유효**

예시 ; ① 산업 공통 과제는 개별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정부 주도 R & D

② 2010년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R&D 전략기획단은 미래 성장동력 발굴, 산업 기술 혁신 사업 방향 설정, 민/관 협력 분야 발굴 등의 Control Tower 역할 수행

- **기업과 정부가 의사소통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가 나서서 기업의 애로 타개 (선진국에서도 활발)**

- 기업 해외 진출 時 정부와 긴밀한 협력 필요. 즉, Legal 안정성 사전 확보 차원이 우선시 되어야 하나, 人脈에 의한 Approach를 중시 함으로서 非 정상적인 상황발생 時 사업 기회 유실 상황 가끔 목도
- Information Sharing 차원에서, 현지 진출 대상 지역 정보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련 정보취득 우수성 등 적극 활용 필요
- 정경 유착이 아닌 진출 기업의 과당 경쟁 배제, 기업과의 협력유도 차원으로 이해되어야 함
- 선진국의 경우 해당 지역 대사관, 기업 이익 대변 단체 등이 민간 기업의 이익 보호에 적극 나서는 것이 일상적임

도전적 R&D로 전환

- R&D 성공률이 지나치게 높음 (90% 수준)
 - 성공적인 과제 중심, 온정적인 평가
- R&D 사업화 성공률이 지나치게 낮음
 - 우리나라 48% Vs 영국 및 미국 70%, 일본 54% (2012)
- GDP 대비 R&D투자 비중 4%대로 세계 최고수준, 국가 기술력평가는 27위 (2016)

R&D 인건비 비중 확대

- R&D 예산구성 中 시설/장비비 50%대로 인건비 비중 약 28%를 크게 상회 (2013)
- OECD는 R&D 예산 인건비 비중 약 46% (2011)
- 정부는 2017년 까지 인건비 비중을 40%대로 상향 목표

R&D 상업화 자금 국가지원

- Death Valley를 극복하려면 국가가 투자위험을 적극 분담 (경우에 따라서는 100%)
 - ※ 1:1 Match 方式은 사실상 “그림의 떡”인 경우가 대부분

- **넓고 노후화된 생산중심의 산업단지에 대한 구조고도화 필요**
 - 전국 20년 이상된 산업단지를 산업과 기술, 사람과 문화, 복지가 공존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행복한 일터'로 리모델링
- **QWL (Quality of Working Life) ; 산업단지를 일터, 배움터, 즐길터로 전환**
-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매력적인 행복산단으로 조성**
 - ⇒ 현장 적합형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 **미국은 AI 스타트업 기업 인수활발 및 2013년 뇌 과학 연구를 위한 브레인 이니셔티브 계획 발표**

※ 아마존의 이비테크놀로지(자연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AI플랫폼 특화) 인수

- **EU도 1조5천억원을 투자한 휴먼 브레인 프로젝트(HBP)를 2013년에 시작**

- **우리나라는 2016.3월 인공지능 분야에 5년간 1조원 투자 방침 발표**

- 페이스북의 원조(아이러브스쿨), 증강현실 기술 원조(한국의 IT산업),
은연분리법 (조선의 광산기술자에 의해 발명되었으나 산업에 응용한 나라는 일본)

⇒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됨 (서비스가 공짜라는 후진적 인식, 기술금융제도 부족)

- **항공우주산업은 조선·반도체·자동차에 이은 미래 유망산업**
 - 한-일, 한-중의 산업별 기술격차는 평균 13년~14년이나, 항공산업은 일본과 중국이 월등
 - ※ 항공우주기술 수준/격차: 미국과 **9.3년** 차이, 중국과 **4.3년** 차이 (2014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분석자료)
 - ※ GDP 대비 우주 예산은 주요국에 비해 매우 취약 (한국 0.03%, 미국 0.2%, 러시아 0.47%, 프랑스 0.11%, 일본 0.03%, 중국 0.04% 등/ 2014년 기준)
- **항공우주산업은 전기, 전자, IT, SW, AI 등 최첨단 과학기술 융·복합산업이자 지식·노동집약의 혼합체이므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높음**

의료 복합 산업화 추진

- **의료 산업 + 관광 산업(숙박, 쇼핑 등) + 韓流 문화**
 - 중국, 중동의 한국 의료 관광 수 대폭 증가
(지난 4년간 중동의 의료관광객수 연평균 54.7%씩 증가)
 - ⇒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관리인력, 통역서비스, 관광서비스업 인력수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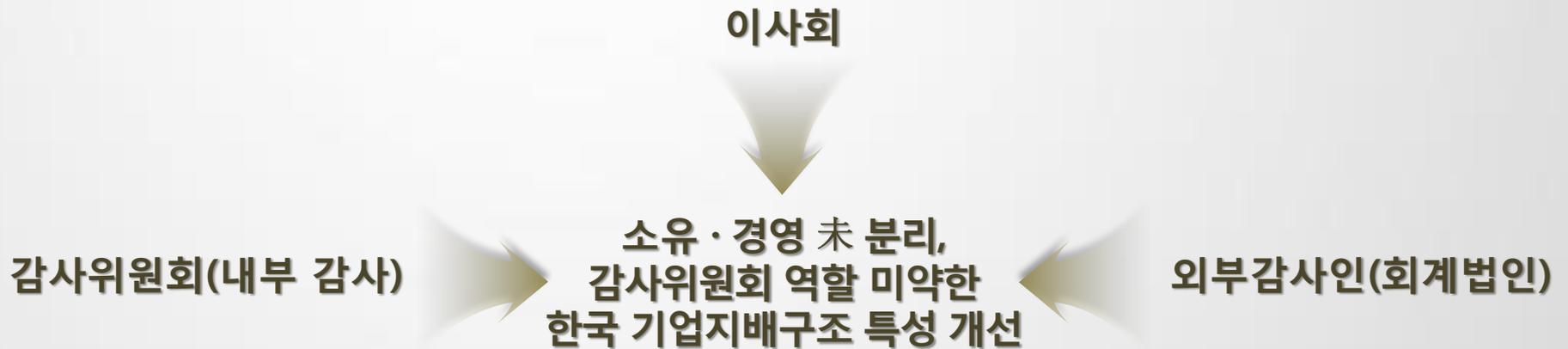
가부장적 규제 철폐

- **국민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일일이 간섭하며 규제하는 가부장적 규제 철폐**
 - ※ 예시
 - ① 과거의 공인인증서 규제 (2014년 의무화는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사용률이 높음)
 - ② 우리나라의 게임산업 규제

8.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소액주주 보호 장치 강화는 시장경제 원리와 Global Standards에 부합하는가?

소액주주 보호보다는 지배구조 선진화에 방점을 찍어야 함



9.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경제민주화와 병행 추진 필요

첨단기술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재편

- 단순 반복적 업무는 자동화 등으로 대체, 창의적 업무 등은 증가되면서 總量 일자리는 유지 예상

※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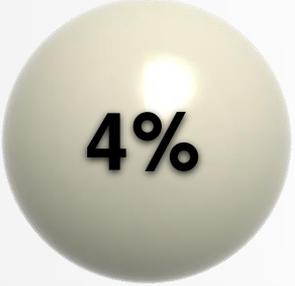
- ① 로봇 확산으로 '17~20년 全世界 2백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 (로봇 산업 운용, 전기/전자, 자동화 등)
- ② ICT 융합 新 산업 분야에서 '25년까지 20만개 일자리 창출

서비스 산업 비중 확대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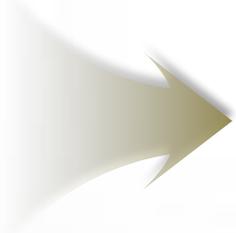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고, G20중에는 중국에 이어 2위 (우리나라 ; 29.5 % / 중국 35.9%)
- GDP중 서비스업 비중과 서비스업 고용 비중 계속 상승 中
 - ① GDP에서 서비스업 비중 ; 51.9% (1990), 57.5% (2000), 59.7% (2015)
 - ② 서비스업 고용 비중 ; 46.7% (1990), 62.6% (2000), 70.1% (2015)

노동시장의 유연한 작동을 통한 人的資源의 효율적 배분은 필수적

마치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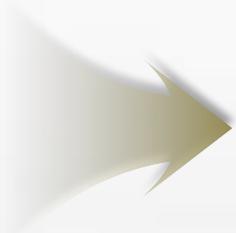
4%



次期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 하여 잠재성장률을
4% 수준으로 올릴 책무가 있음



2년



제시된 정책과제들을 빠른 시일 內 정책화
하려면 임기가 2년이라는 생각으로 신속
하게 움직여야 할 것임

감사합니다